

김제시의회 기자회견

2025. 12. 29.(월) 10:30

브리핑룸(3층)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및 새만금개발청 중립 강력 촉구 -
김제시의회 기자 회견문(오승경 의원)

김제시의회/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지자체 갈등을 이유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기본계획에서 배제하려는 책임 회피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제외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새만금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이며, 새만금 기본계획은 이러한 국가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의 항의를 의식해,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계획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중대한 후퇴이다.

새만금신항은 하루아침에 끼워 넣은 사업이 아니다.

2011년 이전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새만금과 연계된 여러 부처의 개발계획에서 일관되게 전제되어 온 핵심 기반시설로서,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배후의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체계의 중심축이다. 농생명 산업, 식품 클러스터, 첨단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물류가 집적되고 수출되는 구조 역시 애초부터 새만금신항을 전제로 설계되어 왔다.

특히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한 근거 법률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함께 도로·철도·항만 등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새만금개발청의 핵심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체계에 따르면 항만은 새만금사업의 필수 기반시설에 해당하며, 새만금 기본계획과 연계해 검토·반영되는 것이 전제된 시설임이 법적으로 분명하다.

그럼에도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새만금 개발청에 법으로 부여된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는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시행령상 새만금사업지역이 아니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 신항을 새만금사업과 무관한 시설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새만금 기본계획과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항을 새만금 개발의 핵심 기반시설로 전제해 온 기존 행정 판단과 명백히 배치된다.

더욱이 새만금신항은 지난 5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이 결정되었고, 9월에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등 항만법상 항만으로 인정되어 곧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될 것을 전제로 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장래 수요를 예측해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본래 기능임에도, 현재 시점의 법 적용 상태만을 근거로 신항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새만금신항을 전제로 형성돼 온 정책 방향과 계획 체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계획의 연속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은 지자체 간 관할권 갈등을 이유로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새만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국가기관이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기는커녕, 핵심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히 갈등을 줄이겠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특정 지자체의 주장만을 반영하는 방식은 중립도, 조정도 아니다. 이는 편의적 회피이자 사실상의 편들기로 해석될 소지가 크며, 행정판단이 정치적 압박이나 지역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좌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국가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출신 지역 편향 논란까지 자초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계획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중립 행정의 원칙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갈등을 피해 가는 행정이 아니라 법과 계획, 국가적 비전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는 책임 있는 행정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판단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희망고문을 멈추고 현실 가능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분명히 주문했다. 새만금신항은 내년 상반기 2선석 준공과 하반기 개항을 앞둔,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핵심 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를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도약 전략과도 충돌하는 결정이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을 키우는 결정이며, 새만금 사업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김제시의회와 새만금미래 김제 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촉구문 >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반드시 포함하라!
(포함하라, 포함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새만금신항을 배제하는 책임 회피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계획 추진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엄정히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계획 변경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새만금신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새만금의 산업과 물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축을 이루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우리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훼손되는 순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온전히 유지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5. 12. 29.

김제시의회, 새만금미래 김제 시민연대 일동